

# 잡초 뒤덮인 인도...시민들 “어디로 다니라고?”

### 광주 운정동·월산동 등 곳곳 잡초에 엉클까지...관리 제대로 안돼 5·18민주묘지 인근 차도로 걸기도...통행 불편에 사고 위험 초래

여름철 장마와 습한 기온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광주 도심 인도를 뒤덮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광역 지자체임에도 인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북구 일동(78-22)의 광주전변과 인접한 약 500m의 인도는 잡초에 점령당한 상태였다. 인도 폭이 1m 밖에 되지 않는데 무성한 잡초 탓에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다.

바로 옆 도로에는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어 자칫 보행자가 인도에서 내려올 경우 사고 위험도 있었다.

남구 월산동 장애인복지관 건너편(117-10)도 사유지에서 넘어온 풀이 무성했다.

건너편에 월산근린공원이 있고 노후한 주택가로 이뤄진 만큼 노인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관리가 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관 앞 보도는 정돈된 반면 건너편 인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인근 월산동 수박동로(66번길) 인도 역시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한 명도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 잡초가 좁은 인도 곳곳을 파고들어 보행하던 노인들이 차로 방향으로 밀려났다.

인적이 드문 도심 외곽의 인도는 사실상 풀밭으로 변했다.

북구 운정동의 5·18민주묘지 인근 2km 구간 인도는 잡초로 덮혀 보도블럭을 찾을 수 없었다.

인도 안쪽으로 조경수가 곳곳에 심어져 있었지만 관리되지 않은 탓에 오히려 통행을 방해했다.

넝쿨은 인도를 덮칠듯이 자라났고, 잡초와 뒤엉킨 거미줄은 걷는 내내 몸에 달라붙었다. 인도로 걸을 수 없어 차도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설상가상 차들마저 과속을 일삼아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광산구 하남동 진곡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 인도는 아예 걸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보도블럭 사이에는 풀이 비집고 자라 발 디딜 공간이 없었다. 폐쇄된 도로를 연상케 했다.

잡초는 사람 키만큼 자랐고 울타리를 타고 내려온 넝쿨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란 잡초가 걷는 내내 다리를 스쳤다.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익숙한 듯 ‘잡초 인도’를 피해 차도로 걸어들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인도 관리는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한다. 작업 인원이 많지 않은 데다 구역이 너무 넓어 신속한 조치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한 달 주기로 일주일간 공원녹지와 직원 12명이 북구 일대 잡초 제거를 한다”며 “하지만 북구 면적 자체가 워낙 넓고 여름철 잡초의 성장 속도가 빨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봉수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은 “도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가 방치돼 있는 곳이 많다”면서 “광역시에 걸맞은 인도 정비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도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행에 방해되는 곳을 우선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시민들이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좁고 관리되지 않은 인도를 지나가고 있다.(위) 광주시 북구 운정동의 5·18민주묘지의 인도가 잡초로 뒤덮여 있다.

## 어선 불법 증·개축 잇따라 목포해경, 10척 적발

전남 바다에서 불법으로 증·개축한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통발어구 적재대 내부에 선원 침실을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A(9.77 t·진도 선적·연안통발)호 등 어선 10척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호 등 적발된 선박들은 어선검사 후 선박의 원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선박 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적발된 어선의 선주·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수사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서해어업관리단은 영광군 안마도 서쪽 약 96km 해상에서 야간낚시 시 어선으로 어류를 모으려 할 목적으로 켜는 등불인 집어등의 최대전력 기준을 초과해 불법개조한 B(79 t·부산 선적·근해제낚기)호를 검거했다.

B호는 수산업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집어등 설비의 최대전력을 141kW 이내로 설치해야 하지만 최대전력 기준치의 2배를 넘긴 291kW까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B호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확정될 시 지자체에 요청해 어업정지 30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 위반 10대 2명 소년원에 유치

보호관찰 중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들이 소년원에 유치 됐다.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법원이 명령한 야간외출제한 등을 어긴 10대 A군을 구인 조사한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절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어기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보호관찰 기간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기출해 일탈 행위를 한 10대 B군도 소년원 유치됐다.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B군은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하고 선제적인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새로 배정한 자리 맘에 들지 않는다” 남자 고교생이 교실서 여교사 폭행

### 광주서...5일만에 퇴학 처분

광주에서 한 남자 고교생이 ‘새로 배정한 자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여교사를 교실에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극단적 사례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교실에서 A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군은 원하는 자리가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이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고, 충격에 쓰러진 B 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가 중이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24시간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B교사가 A군 부모와 합의해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를 위해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좌회전 중 “왕” 교통사고...알고보니 보험사기

### 광주지검, 추적 끝 10명 검거

검찰이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보험사기 범죄를 추적 끝에 밝혀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낸 A(23)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해 3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다. 나머지 1명은 군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5회에 걸쳐 6억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지도로 1, 2차선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10명이 번갈아 2~4명씩 팀을 만들어 중교

차나 단기렌터카를 타고 2차로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 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도로교통법상 동시 좌회전이 허용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새로 진입한 차로에서도 같은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로를 이탈해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차로를 이탈한 차량의 과실이 90~100%로 산정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같은 사람 명의로 다수 사고를 접수하면 범행이 들쭉날쭉 것을 염려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속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지난해에만 세 차례 사고를 당했다’는 A씨 진술을 주목한 검찰은 보안수사를 통해 범행을 적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탁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